

# 24명 숨졌는데...중대재해 사법처리 '하세월'

### 시행 22개월 광주·전남 21건 발생 ...수사 터져 송치 5건에 기소 1건 뿐 법 적용 1호 '여천NCC 사고' 송치 이후 10개월째 검찰에서 수사 중 재판도 지지부진...정부 내년 확대 적용 유예 움직임에 노동계 반발

광주·전남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한 사법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 검찰, 법원의 사건 처리가 지연되면서 강력한 처벌조항을 마련해 산업현장 중대재해를 막겠다는 입법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는 것이다.

1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노동청)에 따르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광주·전남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중 21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1년 10개월 동안 광주·전남에서 21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총 24명의 노동자가 산업현장에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그럼에도 검찰에 송치된 건수는 5건에 불과하고 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단 1건

뿐이다.

중대재해는 산업현장에서 사망자 1명 이상 혹은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 2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도 중대재해에 해당한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 중대재해 수사를 전담하는 '광역중대재해관리과'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수사한다.

하지만 실제 송치율 기준 사건처리율은 23.8%에 그쳤고 16건은 아직 수사 중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사건처리율이 지난 2021년 63.7%였던 것 과도 큰 차이가 난다. 그만큼 노동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 속도가 더디다.

근로감독관의 경우 업무상 한계 때문에 중대재해

와 관련한 방대한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문 수사 인력이 아니다 보니 원정업체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 의무 위반죄 성립과 함께 중대재해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도 보완수사 요청이 잦아 수사가 장기화하고 있다.

막상 사건이 검찰에 넘어가도 '하세월'이다. 광주·전남의 중대재해 중 검찰에 5건이 송치됐지만 한 건만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전남 중대 재해처벌법 적용 1호 사업장인 '여천NCC' 사고는 송치 이후 10개월째 검찰 단계에 머물고 있다.

지난 2022년 2월 9일 여수시 화치동 여천NCC 여수공장 3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4명의 노동자가 숨지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여천NCC' 대표는 사고 발생 1년여 만인 지난 1월에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송치됐지만, 사고 책임 여부를 규명하지 못해 아직 기소되지 않고 있다.

재판에 넘겨져도 심리가 지연되기 일쑤다.

지난해 4월 20일 광양 현대스틸산업 율촌공장에

서 작업 중에 금속파이프에 끼여 숨진 하청노동자 사건에 대해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지난 5월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검 순천지원에 사건을 넘겼지만, 첫 재판도 열리지 않고 있다.

애초 지난달 17일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기일이 변경돼 오는 14일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상황이 이렇자 노동계에서는 정부와 수사기관, 사법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취지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시행 3개월 앞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대해 추가유예의 방침을 내놓고 있어 노동계의 반발은 더 거세다.

권오산 민주노총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노동안 전보건부장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서 "빠른 사법처리로 사용자 안전에 대한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야 하지만 수사와 사법처리가 늦어져 예방효과가 실종되고 있다. 정부는 물론 사법당국도 산업현장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본연의 역할을 망각해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사건브로커에 수사 무마 요청 40대 코인 사기범 구속 기소

수사기관 고위직들과 친분을 내세운 사건 브로커에게 수사를 무마해 달라고 요청한 40대 코인 사기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문혁)는 A(44)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28억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비상장주식, 미술품 NFT 연계 가상화폐 등을 내세워 투자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에게 검경 사건브로커로 불리는 B씨가 이 사건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거액을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돼, B씨는 현재 광주지법에서 변호사 위반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B씨와 관련해 수사중인 사안의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광주지검 목포지청 소속 검찰을 구속기소하고, 또 다른 광주지검 소속 검찰수사관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수사중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학동 재개발 브로커 문흥식씨 보석 취소 구속

#### 항소심선 징역 4년으로 감형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브로커로 활동한 문흥식(63) 전 5·18구속부상자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지만, 보석이 취소돼 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1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유죄 부분을 일부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씨에게 허가한 보석을 취소하고 추징금 5억 2100여만원도 부과했다.

문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19년 9월까지 학동 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철거공사 계약을 맺게 해주는 대가로 업체 4곳으로부터 12억 4000만원을 받아 7억원을 챙기고 나머지를 공범

이모(73)씨와 나눠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문씨는 징역 4년 6개월에 추징금 9억 7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지만,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후 문씨와 검찰측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문씨는 일반철거 공사업체 선정이 조합장의 업무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대해서는 조합추진위원장 및 사업시행자가 계약체결의 당사자라는 점 등을 들어 문씨에게 혐의가 없다"면서 "문씨가 당시 수수한 5억원과 관련해 전체 금액을 가졌다기 보다는 5억 원을 빌려 금융이익을 취했다"고 판단했다.

문씨는 2021년 6월 봉곡사고가 발생하자 나흘 뒤에 미국으로 달아났다 귀국한 뒤 체포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화재 대비 민방위 훈련 1일 광주시 북구청에서 열린 '화재대비 민방위 훈련'에서 직원들이 화재경보기 소리를 듣고 청사를 빠져나오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골프장 등 해킹...850만건 고객정보 빼내 판 13명 송치

보안이 취약한 골프장, 중고차, 사이트 등을 해킹해 수백만건의 고객정보를 빼내 판매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전문 해커 A(31)씨, 브로커 B(26)씨 등 일당 1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1일 검찰에 송치했다.

13명 중 7명은 구속송치됐다.

이들은 425개 홈페이지에서 빼낸 850만건의 고객정보를 팔아 4억 5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전문해커인 A씨는 브로커 B씨 등의 요청에 따라 자체 제작한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해 해킹한 개인정보를 전달하거나, 의뢰자가 직접 사이트 관리

자 계정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관리자 계정(아이디, 비밀번호)과 접속 URL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킹한 개인정보는 대부분채, 중고차 판매상, 홍보성 문자메시지 대량 발송 업체 등에 판매됐다.

이들은 유명 홈페이지는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돼 해킹이 어렵고 소형 업체 홈페이지는 보안프로그램 업데이트가 늦어 취약한 점을 노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범행을 총괄하는 원선 조직 없이 SNS상으로 의뢰를 받는 등 점조직 형태로 활동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노조활동 방해 제지회사 또 부당노동행위로 고소 당해

'어용노조'를 만들어 노조활동을 방해했던 전남의 한 제지회사가 또다시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금속노조 광주·전남 대양면지회(노조) 등은 1일 지방고용노동청에 (주)대양면지의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조사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노조는 "회사가 금속노조의 조직확대를 방해하기 위해 신입사원 채용 면접 시부터 노동조합에 가

입하지 말라고 압박하고 금속노조에 가입하지 않을 지원자뿐만 채용했다"며 "이는 부당노동행위이자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헌법적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해 12월 대양면지와 단체협약 당시 '부당노동행위 범죄자에 대한 징계와 직원 징계를 차별하지 차별하지 않는다'고 규정했지만, 부당노동행위를 한 이들이 포함된 인사위원회에서 금속

노조 조합원들을 징계하고 징계 대상자를 오히려 승진시켰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주)대양면지 임원 6명은 지난 2020년 3월 회사에 협조적인 노조를 결성기로 한 뒤 노조설립총회를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설립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 받았다. 지난 2019년 5월 폐수를 종이 제작 과정에서 나온 파지더미에 뿌린 뒤 파지와 함께 버리는 수법으로 3t의 폐수를 배출해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적발되기도 했다.

/김대진 기자 kdi@kwangju.co.kr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협**

# 힘으로

튼튼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광주문화신협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5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7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